

2022년 제1회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록_발췌

□ 회의 개요

- 일시 : 2022.5.18.(수), 10:30~12:00
- 장소 : 본관동 3층 회의실(화상회의실)
- 참석 : 청렴시민감사관(3명), 감사청렴부(3명)
- 안건 : 1)청렴시민감사관 임기 연장(안), 2)한국기계연구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 회의 내용

- (안건 1) 청렴시민감사관 임기 연장(안)
 - 원안과 같이 의결
- (안건 2) 한국기계연구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 원안 일부를 조정하여 의결
 - 아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추진

지침	시민감사관 의견	회의 검토 결과
-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해당 제도는 “지침”으로 제정 필요	- 회의 안건 내용대로, “지침” 형식으로 제정

지침	시민감사관 의견	회의 검토 결과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회피, 기피 신청 근거 조항이 법처럼 되어있는지 확인 필요	- 회의 안건 내용대로, 해당 조항 유지 - 지침(안)의 경우, 법 내용과 동일하게, 임직원의 신고회피는 의무사항으로 규율하고, 직무관련자 등의 기피 신청은 선택사항으로 규율				
제6조 제7조 별표1	법 제정 배경('LH 사건') 및 경각심 유지 차원에서, 권익위 표준안에 따라 해당 조항 유지 필요	- 회의 안건 내용대로, 해당 조항 유지 - 지침(안) 제6조, 제7조, 별표1 유지				
제12조	조문 제목 조정 및 '사적 접촉' 의미 명확화 필요 - 지침 적용 대상자(임직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제목 조정 - '사적 접촉'의 개념을 구체화	- 아래와 같이 <u>조문내용 일부 조정</u>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함) 제15조를 참고하여 <u>문구 추가</u> - 조문제목은 당초 안 유지 <table><tr><th>당초</th><th>변경(안)</th></tr><tr><td>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임직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연구원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td><td>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임직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연구원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td></tr></table>	당초	변경(안)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임직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연구원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임직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연구원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당초	변경(안)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임직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연구원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임직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연구원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업무 담당자의 '비밀유지의무' 조항 신설 필요	- 아래와 같이 <u>업무 담당자의 '비밀유지의무' 조항 신설</u> <table><tr><th>당초</th><th>변경(안)</th></tr><tr><td>-</td><td>제00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로서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td></tr></table>	당초	변경(안)	-	제00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로서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
당초	변경(안)					
-	제00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로서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					

지침	시민감사관 의견	회의 검토 결과
		<div> <div>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div> <div>2. 제8조에 따른 원장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div> <div>3.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div> <div>4. 제12조에 따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div> </div>
-	<p>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미** 명확화 필요 **사용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위 <u>표준안에 따라, 지침 제정(안)에는 미 포함</u> - 임직원 대상 교육 및 안내로 대응
-	<p>법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조항을 지침에 포함할지 검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위 <u>표준안에 따라, 지침 제정(안)에는 미 포함</u> - 임직원 대상 교육 및 안내로 대응 ※ 연내 「임직원행동강령규정」 개정 시, 권익위 기준 등을 참고하여 안내
-	<p>법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조항을 지침에 포함할지 검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위 <u>표준안에 따라, 지침 제정(안)에는 미 포함</u> - 차후 권익위에서 요청하거나, 포함시킬 필요성이 발생하면 지침 개정으로 대응
-	<p>법의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등 벌칙 조항을 지침에 포함할지 검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위 <u>표준안에 따라, 지침 제정(안)에는 미 포함</u> - 차후 권익위에서 요청하거나, 포함시킬 필요성이 발생하면 지침 개정으로 대응
-	<p>법 내용이 쉽게 이해되기 어렵기에, 임직원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전직원 대상 관련 <u>교육 진행 계획</u> ※ '22년부터 교육 실시 중('22.4.25. 실시) - 연구원 <u>인트라넷 등을 통해 관련 매뉴얼 및 참고자료 지속 제공 계획</u>

[붙임] 현장 사진

